

韓美 관세협상 후속논의… 車·농산물 등 비관세 분야 조율

산업부, 통상추진위원회

기재부·농식품부 등 관계부처 참석
디지털·플랫폼 규제 조치에 주목

정부가 한·미 정상회담 ‘공동 설명자료(Joint Fact Sheet)’에 포함된 통상 분야 합의 이행을 위한 관계부처 후속 논의에 착수했다.

공동 설명자료에는 자동차·농산물 등 전통적 시장은 물론 디지털·경쟁·지재권·노동·환경·경제안보 등 비관세 전반을 아우르는 조치가 요구돼, 향후 양국 통상 구조에 적지 않은 변화가 예상된다.

산업통상부는 17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주재로 제51차 통상추진위원회를 열고 공동 설명자료에 포함된 비관세 분야 합의사항 후속 조치 이행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는 산업부를 비롯해 기재부·농식품부·국토부·과기부·노동부·기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이 17일 오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기획재정부, 외교부,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 위원회 위원 및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제51차 통상추진위원회’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산업통상부

후부·공정위·금융위 등 관계 부처가 대거 참석해 공동 설명자료에 포함된 합의내용을 공유하고 부처별 후속조치 사항을 점검했다.

공동 설명자료에 따르면, 양국은 자동차·농산물·디지털 규제·경쟁정책·지

재권·노동·환경·경제안보 협력 등 폭넓은 항목에 대해 합의했다.

특히 자동차 분야에서 미국 연방안전기준(FMVSS)을 충족한 차량의 국내 수입 절차 간소화, 농업생명공학 승인 절차 효율화, 디지털 규제의 차별 방지,

공정위 조사 절차의 투명성 강화, 특허 법조약 가입 준비, 노동·환경 기준 협력 등은 모두 구체적인 제도개선이 필요한 영역이다.

이번 후속조치는 국내 시장에도 상당한 영향을 줄 전망이다. 자동차 분야만 해도 관세를 조정과 인증 간소화가 병행되면서 미국산 차량의 국내 공급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농산물·식품 분야에서도 농업 생명공학 제품의 승인 심사 기간 단축과 검역 협력이 강화되면서 수입 확대에 이어질 수 있다.

디지털·플랫폼 규제 관련 후속조치도 주목된다. 공동 설명자료에는 한국이 미국 기업에 차별적 영향을 주지 않도록 망 사용료, 온라인플랫폼 규제, 데이터 국외 이전 정책 등을 정합적으로 관리하기로 한 내용이 포함돼 있다. 이는 국회에서 논의 중인 플랫폼 규제 법안 등과도 직접 연결되는 만큼 향후 제도 조정 논의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지재권·경쟁·노동·환경 기준 분야에

서도 국내 법령·절차 검토가 필요하다. 예컨대 공정위 조사에서 변호사·의뢰인 비밀유지권을 인정하는 방안은 그동안 미국이 지속적으로 요구해온 사안이다. 특허법조약 가입 추진은 해외 기업의 특허 절차 간소화와 직결되고, 노동·환경 규범 강화는 공급망 전반의 규제 준수 의무와 연결될 가능성이 있다.

통상교섭본부장은 이들 후속조치를 토대로 12월 중 미국 무역대표부(USTR)와 한·미 FTA 공동위원회를 개최해 구체적인 이행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여한구 통상본부장은 “지난한 협상 과정을 거쳐 관세협상이 최종 타결된 만큼, 이제는 비관세 분야 후속조치에 만전을 기해 한·미 통상 환경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한·미 FTA 공동위원회 수석대표로서 비관세 협의를 원활하게 매듭지을 수 있도록 관계부처의 긴밀한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metroseoul.co.kr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 우미, 과징금 483억

5개 계열사, 총 4997억 매출 확보 공정위, 우미건설 법인 검찰 고발

공정거래위원회가 기업집단 ‘우미’의 대규모 부당지원 행위를 적발해 과징금 483억7900만원(잠정)을 부과하고, 지원행위 주체 역할을 한 우미건설 법인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17일 “기업집단 우미 소속 회사들이 공공택지 1순위 입찰 자격인 주택건설 실적 300세대를 충족시켜 줄 목적으로, 총수 2세 회사를 포함한 5개 계열회사에 상당한 규모의 공사일감을 제공한 행위에 대하여 시정명령 및 과징금 483억 7900만원을 부과하고, 우미건설을 고발하기로 결정하였다”고 밝혔다.

기업집단 우미는 공공택지 아파트 시공·시행을 핵심 사업으로 하는 건설그룹으로, 브랜드 ‘우미 린(Lynn)’으로

알려져 있다.

공정위 조사 결과, 우미는 2010년대부터 LH 공공택지 입찰에 여러 계열사를 동원하는 ‘벌떼입찰’에 적극 참여해 왔다. 그러나 2016년 이에 대한 사회적 비판이 커지자 LH는 1순위 자격요건을 강화해 ‘주택건설실적 300세대’를 새로 요구했다. 이에 우미는 기존에 입찰에 동원하던 계열사들의 진입 요건을 인위적으로 맞추기 위해 2017년부터 12개 아파트 현장에 실적이 없던 5개 계열사를 비주관시공사로 선정했다.

지원 대상 5개 계열사는 총 4997억원에 달하는 매출을 확보하며 모두 연 매출 500억원 이상 중견사로 성장했다. 공정위는 “대부분 매출과 공사 경험이 전무한 업체들이었고 사실상 이 사건 지원행위만으로 시장에 진입하여 성장했다”고 밝혔다.

지원받은 업체들은 확보한 실적으로

275건의 공공택지 입찰에 참여했고, 우미에스테이트·심우종합건설은 2020년 실제 2개 택지를 낙찰받기도 했다. 이를 통해 우미그룹은 매출 7268억원, 매출 총이익 1290억원을 추가했다.

특히 우미에스테이트는 총수 2세 2명이 자본금 10억원으로 설립한 회사로, 설립 4개월 만에 880억원 규모 일감을 제공받았다. 이후 실적을 근거로 공공택지를 낙찰받았고, 2022년에는 두 오너 2세가 보유지분 127억원을 우미개발에 매각, 5년 만에 117억원의 매각차익을 실현하기도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특수 관계인 회사가 아니더라도, 입찰자격을 인위적으로 만들어주기 위해 계열회사를 지원하는 경우, 공정거래법상 ‘부당한 지원행위’에 해당할 수 있음을 확인했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농산물 유통체계 개편, 가격변동 줄일 것”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정부가 농산물 유통단계의 간소화를 추진한다. 또 유통체계를 온라인도매시장 중심으로 개편한다. 이를 통해 가격 변동 폭을 줄여 나간다는 게 정책의 골자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17일 서울 포시즌스호텔에서 문미란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회장 등 10대 주요 소비자단체 대표들과 간담회를 갖고 이 같은 계획을 밝혔다.

송 장관은 “유통단계를 합리적으로 줄이고 온라인도매시장을 중심으로 유통체계를 재구조화해 가격 변동 폭을 줄이겠다”며 “이를 통해 소비자들이 더 신선한 농산물을 보다 안정적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농축산물 물가 점검과 합리적 소비문화 확산을 위해 소비자단체의 적극적인 역할을 당부했다. 또 현장에서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17일 서울 포시즌스호텔에서 소비자단체 대표들과 간담회를 갖고 있다. /농식품부

제기된 의견을 정책에 충실히 반영하겠다고 답했다.

참석자들은 농식품 분야 주요정책 및 수급안정 대책에 대해 논의했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이번 간담회는 농식품부와 소비자단체 간 소통을 강화하는 동시에, 농산물 유통개선 등 최근 추진 중인 정책과 관련해 공감대를 이루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됐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

‘대한민국 지방시대 엑스포’ 내일 개막

사흘간 울산전시컨벤션센터서

국가 균형성장 전략의 대표 홍보무대인 ‘2025 대한민국 지방시대 엑스포’가 오는 19일부터 21일까지 사흘간 울산전시컨벤션센터에서 열린다.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이 주관하는 이번 행사는 ‘K-BALANCE 2025’를 슬로건으로 중앙부처·지방정부·공공기관 등 47개 기관이 참여하는 국내 최대 규모 정책 박람회다.

올해로 23회째를 맞은 지방시대 엑스포는 새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5극3특(5대 초광역권·3대 특별자치도)’ 전략을 중심으로 자치분권·국가균형발전 정책을 한자리에서 체험·소통할 수 있는 장으로 꾸며진다.

특히 올해 처음 마련된 ‘5극3특 미식회’는 유명 셰프들이 지역 식재료를 활용해 개발한 한정 메뉴를 선보여 지역 농수산물의 매력을 알리는 프로그램으로 관심을 모은다.

전국 지자체의 답례품을 확인하고 현장 기부도 가능한 ‘고향사랑 기부 박람회’, 울산 프로축구·프로농구 구단이 함께하는 ‘스포츠 챌린지’, 반구천 암각화 등 울산 명소를 둘러보는 ‘문화·산업투어’ 등도 운영돼 체험 요소가 한층 강화됐다. 유흥준 국립중앙박물관장을 비롯한 다양한 연사의 ‘오픈 스테이지 특강’도 예정돼 있다.

정책 홍보전시에는 정부 부처와 17개 시·도, 교육청 등 43개 기관이 참여해 균형발전 우수사례를 선보인다. 신안군

의 재생에너지 개발이익 공유제인 ‘햇빛연금’을 비롯해 지방자치 30주년 기념관, 시·도 굿즈관 등 신규 테마관도 마련된다. 지역 특화정책과 주민 체감형 혁신 사례를 콘텐츠 중심으로 구성해 방문객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했다.

정책 컨퍼런스는 ▲균형성장 ▲자치분권 ▲지역활성화 ▲국정과제 등 4개 분야에서 총 26개 주제가 다뤄진다. 새 정부의 정책 방향을 공유하고, 지속가능한 지역 발전 전략과 자치분권의 내실화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가 될 전망이다.

민병주 KIAT 원장은 “이번 지방시대 엑스포는 지역이 주도하고 국민이 주인공이 되는 ‘모두가 잘 사는 균형성장’ 여정의 공식적인 출발점이 될 것”이라며 “많은 국민이 직접 찾아 균형성장을 통한 대한민국의 새로운 비전을 보고, 듣고, 느끼길 바란다”고 말했다.

/세종=한용수 기자

기후부, 美서 ‘녹색기술 투자유치 설명회’

국내기업 미국시장 진출 기반 마련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이달 18일(현지 시간)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제3차 K-그린데이 녹색기술 투자유치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캘리포니아 서니베일에 위치한 ‘플러그앤플레이 테크센터’에서 열리는 이 설명회는 녹색산업 분야에서 기술 경쟁력을 확보한 국내 기업의 해외 투자유치 역량을 강화하고, 미국시장 진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됐다.

미국은 민간투자 규모가 가장 큰 시장으로 환경·에너지 전환 분야 창업 생태계가 활발해 기술투자 가능성이 높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023년부터 실리콘밸리에서 K-그린데이 설명회를

매년 개최하고 있으며 올해는 ‘플러그앤플레이 실리콘밸리 11월 서밋’과 연계해 진행될 예정이다.

올해 설명회에는 미국 벤처캐피탈, 투자자, 현지 진출 국내기업 관계자 등이 참석해 국내 녹색기술의 성장 가능성과 투자 협력 방안을 논의한다. 정부는 참가기업 공모를 통해 12개사를 선정했으며, 미국 투자시장 정보, 자료 작성 방법, 발표 기술 등을 중심으로 집합 교육과 기업별 맞춤 교육을 제공해 발표 역량을 강화했다.

참가기업들은 수소에너지 생산·모듈형수전해시스템(라이트브릿지), 지능형 누수관리 시스템(위플렛) 등 미국 투자자 관심이 높은 기술을 보유하고 있어 현장에서의 투자 연계 가능성이 주목된다. /세종=김연세 기자